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2008. 5

통일정세분석 2008-07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2008. 5

---

이 금 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 수 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                                |    |
|--------------------------------|----|
| I. 문제 제기 .....                 | 1  |
| II. 문타본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 3  |
| 1. 보고서의 구성 .....               | 3  |
| 2.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 6  |
| 3. 의사소통(Communications) .....  | 17 |
| 4. 권고사항(Recommendations) ..... | 18 |
| III. 주요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    | 24 |
| 1. 주요 특징 .....                 | 24 |
| 2. 정책적 고려사항 .....              | 27 |

# 표 목차

|                                     |    |
|-------------------------------------|----|
| <표 II-1> 연도별 북한인권실태 구성 항목 비교 .....  | 5  |
| <표 II-2> 연도별 북한당국에 대한 권고사항 비교 ..... | 22 |
| <표 II-3> 연도별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 비교 ..... | 23 |

## I. 문제 제기

- 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굶주림을 피해 탈북 행렬이 이어지면서 북한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 국내외 비정부인권기구, 연구기관, 미 국무부 등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북한 인권의 공론화를 주도하여 왔음.
  
-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구체적 조치들이 모색되어 오고 있음.
  - 1997년,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북한은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열악한 인권상황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됨.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위임 권한(mandate)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2004/13)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인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에 대한 임무 및 담당자(특별보고관)의 역할을 매년 결의에 따라 연장하여 왔음.
  - 2008년 3월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비탄 문타본 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됨.

-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 거부 자세로 일관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3년 연속 채택
- 비티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유엔인권위원회(이후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
- 본 보고서에는 문타본 보고서의 구성, 정책 권고사항을 등을 정리하고 내용상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II. 문타본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1. 보고서의 구성

- 문타본 보고서는 크게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북한당국(주제네바 북한대표부 포함)과의 통신(서신 교환) 내용, 조사를 위한 현지국가 방문 내용,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몽골, 일본, 한국을 방문하여, 탈북자 및 납치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상황이 개별국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제출한 문타본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기술 항목은 <표 II-1>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기존 보고서들은 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식량권과 생명권 중심으로 기술
  -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 2007년부터 북한당국의 책임 강조
  - 2008년에는 북한인권 침해의 사회구조를 분석적으로 정리
  - 특히 개발과정을 인권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평가
- 본 보고서는 문타본 보고관이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북한인권상황을 다루고 있음.
  - 특별보고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과 교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에 응하도록 유도했으나, 북한당국은 이제까지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거부함.

- 특별보고관은 북한당국이 4대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규약위원회에 북한대표가 참석한 것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건설적인 측면으로 평가함.
  - 2007년 11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3차·제4차 이행보고서를 합권으로 제출(CRC/C/PRK)
  - 북한이 마약관리 및 돈세탁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
  - 2004년 개정 형법에서 아편 및 마약의 제조, 밀매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2006년 6월에는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 노력
  - 2007년 8월 수해 발생 이후 인도적 기구들의 수해피해지역 접근 확대, 유엔 및 기타기구들과 식량분배, 극빈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력



<표 II-1> 연도별 북한인권실태 구성 항목 비교

| 연도    | 분류                             | 실태 구성 항목  |
|-------|--------------------------------|---|
| 2005년 | 특별과제<br>(Special Challeng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권과 생명권</li> <li>- 개인안보, 인간적 대우, 비차별과 정의에 대한 접근권</li> <li>- 이동의 자유와 이동(displacement)과 관련된 개인의 보호</li> <li>- 최고수준의 보전에 대한 권리와 교육에 대한 권리</li> <li>- 자결과 정치참여권,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표현·신념·견해의 자유, 결사와 종교의 자유</li> <li>- 특별 관심집단의 권리: 여성과 아동</li> </ul> |
| 2006년 | 전반적 관심사항<br>(General Concer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권과 생명권</li> <li>- 개인안보, 인간적 대우, 비차별과 정의에 대한 접근권</li> <li>- 이동의 자유와 이동(displacement)과 관련된 개인의 보호</li> <li>- 자결과 정치참여권,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표현·신념·견해의 자유, 결사와 양심, 종교의 자유</li> </ul>  |
|       | 특별 관심사항<br>(Specific Concer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권리</li> <li>- 아동의 권리</li> <li>- 노인의 권리</li> <li>- 장애인의 권리</li> <li>- 매우 동질화된 사회에서 화교의 문제</li> </ul>  |
| 2007년 | 핵심관심사안에<br>대한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 식량, 영양, 관련문제에 대한 권리</li> <li>- 자유: 개인안보, 인간적 대우, 정의에 대한 권리</li> <li>- 망명: 난민에 대한 권리</li> <li>- 취약: 특별집단에 관한 권리</li> <li>- 책임: 인권과 자유를 보호할 국가당국의 책임에 관련된 권리, 관련 책무</li> </ul>   |
| 2008년 | 인권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 개발과정: 불공평 요소?</li> <li>- 식량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 불균형 요소?</li> <li>- 권리와 자유: 불안전 요소?</li> <li>- 이동 및 망명: 이동불가 요인?</li> <li>- 특별 관심집단: 불평등 요소?</li> <li>- 폭력 및 침해의 결과: 무처벌 요인?</li> </ul>   |

- 6자회담의 진전(2007년 2·13합의와 10·3 합의로 북핵 불능화 조치)을 환영하며, 보다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평화번영의 진전을 위한 합의서 채택을 통해, 두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어 인권에도 잠재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

## 2.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북한 인권상황은 주요 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입증하는 차원에서 유엔총회 결의안(62/167)이 재차 채택됨.
  -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총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보고관이 조사 및 정책제안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

### 가. 인권과 개발과정: 불공평(inequity) 요소?

- 2,300만 인구의 북한사회 개발과정에 대한 정보는 빈약하며,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북한경제는 1999년부터 다소 회복되었으며, 2004년 국민 1인당 소득은 914달러
  - 1996년 외채는 120억 달러로 주로 주변국에 대한 부채
- 북한 개발과정에서의 공평성 부재
  -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로 인한 불공평성
  - 정권의 정점에 있는 엘리트들이 주도, 나머지는 개발과정에서 소외
  - 정권생존 차원에서 이념편향적인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불공평한 개발방식 가속화

- 북한의 지배계층 유지를 위한 비민주적 구조에 의해 운영
  - 이로 인한 예산 왜곡과 지배엘리트에게 유리한 분배구조 형성
  - 권력층이 혜택을 받는 비밀(지하)경제 작동
  -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부재: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요소로 주민참여 강조
- 북한은 ‘선군정치’를 견지하며, 수백만이 군수산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정부에 의한 국민경제 비율을 감안할 때, 북한의 직·간접 군사예산은 전체 경제성장을 저해할 만큼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
  -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박탈에도 불구하고 군사화를 추구하여 가용자원 고갈
  - 군사화 정책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통해 표출, 이는 외부의 지원 가능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차 회담이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군축 및 군사예산의 민간예산 투입은 아직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
- 일반주민들은 식량 및 기타 기초생활품 부족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와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함.
- 주민들은 장사 등 다양한 생존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나, 당국은 주민에 대한 통제 상실을 우려하여 강력한 단속 실시
  - 국가사회보장체계 약화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에 대한 규제 법률과 규정이 새로 제정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 가중 요인으로 작용
  - 50세 미만 여성의 장사 금지 및 시장건물 밖에서의 거래 금지, 순찰 강화

-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원하는 인구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바, 인구현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관련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나. 식량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 불균형(disparity) 요소?

- 엘리트의 식량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과 일반주민의 생존수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불균형 요소가 지속적으로 작동함.
  - 국가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엘리트의 우선권
- 북한은 외부로부터 식량(주요 창구 WFP), 의약품, 비료, 전력 등의 지원을 받아왔음.
  - 2006년 WFP는 190만 명을 대상으로 1억 2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는 2개년 구호 및 복구사업(PRRO) 시작
  -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으로 외부의 지원 사업에 지장 초래
  - 지원 대상 계층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추가지원 필요
- 2007년 8월 심각한 수해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거의 100만 명의 주민이 곤경에 처함.
  - 긴급구호가 이루어지고, 수해에 대한 1,400만 달러 상당의 지원 제공
  - 2007년 말 UNICEF와 북한당국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5~19세 어린이 영양실태조사 실시
- 유엔은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No access, No food)’원칙에 기초하여 활동하고 있음.

- WFP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지적
  - 북한당국은 식량 모니터링 방문계획에 대한 사전통지 요구
  - WFP 모니터링 요원들은 현장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이 허용되지 못하며, 수혜자 유형 및 소비 식량의 양 등에 대한 정보 확보 제약
  - 2006년 WFP PRRO 집행이래, WFP는 매달 방문하여 총 58회 모니터링 실시
  - WFP와 북한당국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북한당국은 WFP 직원의 식량분배지역에 대한 여행 허용
  - WFP가 식량분배통계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무제한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 합의 확대 지속 노력 권고
- 외부지원이 대체자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식량안보 확보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소득 및 식량생산에서 주민참여 확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 과정 필요 연계
  - 수확 전후 손실분, 수역 보존, 산림황폐화 방지,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과도한 이용 방지, 농업개발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주민 참여 확대 등이 실질적 계획에 포함

#### 다. 권리와 자유: 불안전(insecurity) 요소?

- 정권에 의한 억압, 협박 및 광범위한 정보체계 등 주민들의 신변불안을 야기하는 요소 등으로 인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 당함.
- 당국은 주민을 3계층(핵심, 기본, 복잡군중)으로 분리

- 핵심계층은 지배 엘리트로서 특권(개인전화, 해외발간물 소지가능) 향유
  - 기본계층은 식량배급을 받지만 당국의 시장경제 실험과 식량배급체계 축소로 배급량 감소
  - 적대계층은 대학진학 불가, 주택,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요건 접근 차별
  -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집단처벌 혹은 가족 연좌제 적용
- 민주적 의미에서 정치참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이 완전한 통제를 유지함.
- 언론에 대한 엄격한 통제
  - 주민들의 핸드폰 및 컴퓨터 개인 소지 불허, 핸드폰 단속
  - 일부주민들은 비밀리에 한국 비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시청, 적발될 경우 처벌
  - 북한당국은 종교자유를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선교사들을 접촉한 경우에 처벌
- 2004년, 2005년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지속함.
-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법체계 및 구금시설관련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 다수 발생
  - 구금시설 내 고문, 아사로 연결되는 영양실조, 사체 훼손 및 부적절한 처리 등 다차원적 차원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북한당국은 외국인 납치에 관여하여 왔음.
  - 일본인 납치뿐만 아니라 12개 국 이상의 국민이 납치된 것으로 보고됨.

#### 라. 이동 및 망명: 이동불가(immobility) 요인?

- 정권초기부터 북한당국은 국가통제 수단으로 이동을 엄격하게 규율하여 왔음.
  - 허가 없이 국내외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이동하면서, 이동불가 정책의 의미 퇴색
  - 북한 내 특별경제구역 혹은 노동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 간 협약에 의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노동자가 발생하기 시작
  
- 망명 및 피난과 관련, 일반적인 난민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박해를 근거로 북한을 떠난 경우), 현장난민(북한을 떠난 이후 박해위험 발생)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발견됨.
  - 박해위험은 대체로 잠재적 혹은 실제 박해와 유사
  - 일부지역에서는 송환자 처벌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됨.
  - 그러나 허가 없이 수차례 국경을 넘은 경우, 당국에 적대적인 정치적 연계를 가진 경우, 주변국에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 혹은 강제노동, 투옥 조치
  
- 해외에서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국경단속의 강화로 주변국으로의 망명 어려움.
  -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중개자(smugglers)에 의존하며,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고액의 대가 지불 필요

- 탈북이후 중국 이외 제3국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국 장기체류자와 단기체류자의 경우 차이 발생
  - 장기 혹은 단기체류자 모두 제3국 이동시 일부국가에서는 불법입국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출신국의 보호가능성이 있는 불법이주자가 아닌 망명신청자로서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 탈북자들이 망명요청을 하는 국가에서는 이민법의 엄격한 적용대상이 아닌 인도주의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 북한주민을 부모로 두고 북한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됨.
- 아이가 출생한 지역에서 부모가 비밀리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당국과의 불법적인 합의 없이는 출생등록자체가 불가능
  - 출생아동들의 국적부여 문제
  - 남한 법에 명시된 원칙(모든 북한인들이 남한주민으로 간주)이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의 문제
  - 특별보고관은 이들 어린이들이 무국적자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
- 탈출과정에서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면서 가족결합의 문제가 발생함.
- 가족 결합의 문제는 가족들이 모두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주민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 주변국에서 탈북자가 다른 나라 국민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복잡한 문제 발생



- 이 경우 많은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유연한 양자 간 혹은 기타 협상으로 가족결합의 문제 해결 모색 필요
- 주변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에게 위협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제는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북한의 보안원들이 주재한다는 점임.
  - 이들 요원들은 탈북자들이 귀환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위협을 포함 다양한 수단 동원
- 북한주민들의 이동은 매우 복잡한 사안임.
  - 이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탈출의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혹은 기타 요소들이 작용
  - 취약계층인 탈북자들을 희생시키는 인신매매 및 밀매자들에 의해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현상 초래
  - 탈북자들의 이동목적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인권을 존중하는 인도적 대응필요
  - 국제법의 주요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을 위험지역인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강제송환 금지
-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적정임금, 집단협상권, 결사의 자유, 송금권, 인간적인 노동환경권 등 노동권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함.
  -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미가입
  -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참여하고 국내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

#### 마. 특별 관심계층: 불평등(inequality) 요소?

- 북한헌법은 남녀 차별금지 및 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커다란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은 상당수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고위직 진출은 매우 제한적
  - 정형화된 여성역할 이외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
  - 가정폭력부터 국가와 연계된 폭력까지 다양한 여성폭력 존재
  
-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이 특별 관심사안의 대상임.
  - 정권의 적대계층으로 간주되어 차별과 소외의 대상
  - 적대계층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량 및 생필품 접근에서 차별
  - 최근 의약품 및 식수 부족 등과 식량난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
  - 특히 인신매매 혹은 밀매매에 처하게 되는 탈북 여성에 대한 관심 필요
  
- 아동권리와 관련,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제3차·제4차 이행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자체 평가를 살펴볼 수 있음.
  - 2005년 담배통제법에서 미성년자 대상 담배거래 금지
  - 2004년 형법 개정,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범죄유형을 구체화한 점
  - 2004년 가족법이 모성 및 어린이 보호 규정
  - 2001~2010년 어린이 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새 천년개발목표(MDG)를 반영

- 북한의 수직적이고 계층화된 정치체계를 감안할 때 아동의 권리 이행 평가는 매우 중요함.
  -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차별 위험
  - 버려진 아동 및 유랑아동(‘꽃제비’)들에 대한 보호 및 생존 필요
  - 북한의 이행보고서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아동(탈북아동, 정치적 반대자들의 아동, 소수집단의 아동, 학대/유기 아동, 당국과 갈등 관계 아동)들에 대한 특별보호 수단에 대해 매우 미흡한 상황
  - 국제적인 소년범죄체계를 감안하여 아동관련 형법체계 개선 필요
  
- 노인들의 취약성은 북한의 식량 및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박탈로 인해 더욱 심각해짐.
  - 장애인의 어려움과 유사
  
- 특별보고관은 주요한 사안으로서 가족결합을 강조함.
  - 탈북하여 주변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최종 정착지로 떠나기 전 가족들을 남겨놓는 사례가 다수 존재
  - 탈북자들의 가족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양자 혹은 기타 수준의 정책 채택 필요
  - 북한 혹은 기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 위협 혹은 기타 강제행위들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장 필요

#### **바. 폭력 및 침해의 결과: 미처벌(impunity) 요인?**

- 북한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는 장기간 인권침해가 존재 혹은 지속하도록 한 미처벌 요소를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음.

- 지방관료들의 잘못된 행위를 다루게 되는 초기의 유연한 대처방식은 이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책무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
  - 법집행자들이 주민에게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적 기준이나 법치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
  - 북한의 사법적 비독립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체계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려움 상존
- 좀 더 강력한 개입조치로는, 국제적 환경에서 국가의 책무성 혹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성 등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임.
- 특별보고관은 무처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책임성 강조
  -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등을 통해 진전되었으며, 책임성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강화
  - 북한 내 침해사안들이 전반적인 유엔체계 내에서 특정시점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될 것인지 여부
- 시민사회는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왔음.
- 주민 ‘보호자’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강제권을 갖는 결의안 활용
  - 중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 조치들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활용하고자 시도
- 이상의 사안들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적인 체계 중의 일부임.

- 기타의 협약(지역, 양자 혹은 복합)들을 검토하여 무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
  - 북한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사법체계 개선 및 인권 실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점은 유감스러운 사실
-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이 양자회담 및 기타 논의를 통해 일부 인권사안들(실종 및 이산가족문제, 납북자문제를 다룰 한반도평화협정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권준수를 촉구하는 추가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임.
  - 상당부분 조치들이 북한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할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음.

### 3. 의사소통(Communications)

- 특별보고관은 특정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당국과 연락을 취하여 오고 있음.
  - 2005년 11월 18일 보고관은 북한정부에 통신문을 전달하였는데, 2005년 12월 1일 답신에서 북한정부는 특별보고관의 위임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권문제에 관해 특별보고관과 만나거나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2006년 제6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 2005년 12월 20일, 2006년 3월 24일 보고관은 각각 북한당국에 통신문을 전달하였는데, 북한정부는 답변에서 통신문의 내용을 거부하며, 인권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위임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확고하게 견지(2007년 제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

출한 보고서)

- 2007년 2월 22일 특별보고관은 북한당국에 대해 처형의 위협에 처한 것으로 보고된 2명의 군인과 관련 북한당국에 연락하였음.
  - 이들 군인들은 회령근처 국경지역 수비대로 파악됨.
  - 이들은 탈북자들의 도강행렬을 당국차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의 무허가 중국방문을 지원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음.
  - 특별보고관의 연락에 대해 북한당국은 무응답
  - 특별보고관은 다양한 방식의 기타 연락을 받았으나, 이것들은 특별보고관의 임무 밖의 영역에 해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통로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교차 참조하였음.

#### 4. 권고사항(Recommendations)

-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오고 있음.

##### <북한당국에 대한 권고>

- 북한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개발과정 보장
  - 북한이 다수 인권조약 가입국이라는 점에서 인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행하여야 함
  - 군사화과정의 자원을 사회개발 분야로 전환하여야 함.
- 식량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 극복 필요

- 광범위한 주민 참여에 기반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통해 식량안보 형성
- 국가체계를 자유화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
  - 사업 및 구금체계관리 현대화
  -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납치자 및 실종자 문제 해결 노력
  - 기소된 자에 대한 신변안전, 공정한 재판, 독립적인 사법체계 구축과 같은 법치주의 존중
- 허가 없이 탈북하는 자들에 대한 명확한 무처별 정책 채택
  - 귀환 탈북자에 대한 처벌 중지
  - 관련 법률개정 및 실무자 교육 실시
- 탈북자 발생의 근본요인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처벌없이 인간 밀매, 인신매매, 강탈 과정에 관여된 자 처벌
  - 관련 국제조약 가입
- 국제이주기구 협약에 가입할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
- 불평등 및 차별 극복을 통해 여성, 아동 및 기타 집단의 권리 보호
- 처벌되지 않는 폭력 및 침해에 대한 처리
  -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처리되도록 보장
- 특별보고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 기대

- 북한인권상황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지원 촉구
  - 북한이 가입한 인권조약 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관계 유지

####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북한 내 주민참여 및 지속가능한 방식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지원이 지원 대상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는 원칙하에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의 지속과 함께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 강조
- 강제송환 원칙 등 난민 권리 존중, 이주자 권리 준수
  -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 구금을 초래하게 되는 북한의 이민법의 심각한 조항들을 완화
- 북한과 분쟁사안 해결을 위한 대화 극대화
  -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패키지, 적절한 안전보장조치와 연결된 압력완화 등을 포함한 인권대화 및 조치 기회 확대
- 인권존중을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 조정된 조치 보장
- 당국 책임성 혹은 개인의 범죄책임성 등이든 실질적인 개입방식을 통해 무차별 요소를 다루어야 함.



## <평가>

-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함.
  -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법개혁, 법률종사자의 역량강화 등 법치주의적 요소들을 강조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기술협력 강조
  - 다양한 인권 모니터링 기구 및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촉구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안보보장 및 경제발전 등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함.
  - 탈북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 촉구
  - 2007년부터 인권 침해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 등 책무 촉구

<표 II-2> 연도별 북한당국에 대한 권고사항 비교

|           | 권고 내용  |
|-----------|--|
| 2005년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권기준의 준수</li> <li>- 법과 관행의 개혁</li> <li>- 민주주의,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 비군사화와 더불어 인권 지지</li> <li>- 법치 준수(사법부의 독립, 독립인권기구 및 진정한 비정부기구 설립, 독립 언론매체 등)</li> <li>- 사법행정의 개혁</li> <li>- 실향의 근본요인 대처, 실향민의 박해와 희생 방지</li> <li>- 납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 제공</li> <li>- 법집행 기구의 역량 구축</li> <li>-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집행기구와 다른 기관들에게 명확한 지침 제공</li> <li>- 인도적 지원의 확보</li> <li>- 특별보고관과 기타 메커니즘의 방북 초청</li> <li>-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로부터의 기술협력 추구</li> </ul>   |
| 2006년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로 있는 4대 인권협약의 이행을 통한 인권의 효과적 준수</li> <li>- 취약집단에 대한 식량분배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기구 체류 허용</li> <li>- 국내법의 개혁</li> <li>- 감옥 시스템의 개혁</li> <li>- 인권준중을 확보하기 위한 법, 정책, 관행의 개혁</li> <li>-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인종과 같은 특별관심집단에 대한 대처</li> <li>- 법률종사자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고 훈련 등을 통해 역량구축 확보</li> <li>-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로부터의 기술협력 추구</li> <li>- 특별보고관과 기타 메커니즘의 방북 초청</li> <li>- 북한이 당사자로 있는 4대 국제인권협약 하의 다양한 인권모니터링기구 초청</li> </ul>  |
| 2007년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국제조약 하의 국제적 의무 준수</li> <li>-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접근 촉진, 모니터링을 위한 필요 존중, 식량안보 구축</li> <li>- 감옥시스템의 개혁, 인간에 대한 폭력 제거, 법치의 증진</li> <li>-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정책 표명, 법 개정 및 관련 관리 교육</li> <li>- 난민유출 근본 요인 대처, 난민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범죄화</li> <li>- 여성, 아동, 기타 취약집단의 권리 보호</li> <li>- 인권위반을 방지·억제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li> <li>- 보고관이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입국 허용</li> <li>- 당사자로 있는 국제인권협약 아래 다양한 인권모니터링 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li> <li>-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로부터의 기술협력 추구</li> </ul> |

<표 II-3> 연도별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 비교

|           | 권고 내용  |
|-----------|--|
| 2005년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송환 금지, 일시적 보호 조치 제공 등 난민보호 지지</li> <li>- 북한당국과 질서있고 안전한 이민 채널 증진</li> <li>- 첫 망명국에서의 정착, 제3국에서의 정착,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 등을 포함, 난민을 돕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 제공</li> <li>- 투명한 모니터링과 책무성에 의해 지원이 취약한 집단에 도달하도록 확보</li> </ul> |
| 2006년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식량원조 지속</li> <li>- 난민보호를 위해 강제송환 금지 등 망명원칙 존중</li> <li>- 북한당국이 감옥시스템을 개혁하고 법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인권발의와 안보보장 및 경제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패키지화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안보 우려에 대해 균형된 방식으로 대응</li> </ul>                      |
| 2007년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의 제공</li> <li>- 난민의 권리 존중</li> <li>- 북한당국을 관여시킬 수 있는 대화와 다른 상호작용 활용</li> <li>- 북한 내 인권을 증진·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의 총체성(totality) 동원</li> <li>- 인권위반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응결시키는 과정 지원</li> </ul>                      |

### Ⅲ. 주요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 1. 주요 특징

#####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요인 동시 평가>

- 문타본 보고관은 북한당국이 인권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에 대해 건설적 측면이라고 평가함.
  - 4대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이행보고서 제출
  - 특히 마약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형법을 개정한 사실 높이 평가
  - 수해 이후 접근 보장 및 분배과정에서 국제인도기구와 협력
  - 6자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이 인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
  
- 북한당국의 일부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상황은 주요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함.
  -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징표로 제시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 부정 지속
  - 정권에 의한 억압, 협박 및 광범위한 정보체계 등 주민들의 신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 등으로 인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
  - 당국에 의한 자유권 통제와 공개처형의 지속
  - 사회보장체계의 와해로 인한 경제·사회 권리 저하

### <북한 내 인권 침해의 구조적 요인에 주목>

- 기존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인권실태 중심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는데, 2008년 보고서에서는 인권실태를 기술하면서도 북한 내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북한 내 계층화된 정치구조, 왜곡된 분배 구조, 주민참여 부재와 비민주적 구조, 선군정치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접근권에서의 불균형 등이 북한 내 인권 유린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함.
- 장마당을 통해 생존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나 당국에 의한 단속과 통제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취약 집단에 대한 지속적 관심 강조>

- 문타본 보고관은 2005년 보고서에서부터 여성, 아동 등 차별을 당하기 쉬운 취약집단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오고 있음.
  - 이후 노인, 장애인 등으로 취약집단의 관심 대상을 확대
- 또 다른 취약 요인으로 가족의 결합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음.

### <개발과 인권의 조화 강조>

- 2008년 보고서에서 문타본 보고관은 북한의 개발이 인권개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음.
  - 북한의 경우 개발에 대한 정보 빈약

- 개발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공평성 부재, 선군정치에 따른 군사화로 인해 개발이 인권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점을 지적함.

#### <이동의 자유와 탈북자 문제 해결 지속 부각>

- 보고관은 2005년 보고서부터 이동의 자유와 탈북자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하여 왔음.
  - 협약난민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 현장난민 등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위 부여 방안 모색
  - 특히 해외 체류 탈북자 출산 아동의 국적부여 등 보호방안 마련 시급성 강조
  - 또한 탈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재결합의 문제 강조

####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촉구>

- 국제 NGO를 중심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시민사회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처벌을 강조하는 활동 소개
  - 인권침해자에 대한 무처벌이 북한 내 지속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초래
- 문타본 보고관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현상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중요 사안이라는 점을 수용함.
  - 국내 차원에서 법집행 관리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
  - 국제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성, 개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성 강조

## 2. 정책적 고려사항

### <인권유린 요소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

- 문타본 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북한 내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나감.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 정부 실무자, NGO 관계자들로 ‘북한인권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북한 내 인권유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
  - 특정 침해사례 중심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북한인권 실태와 북한당국의 정책 분석>

- 객관적 실태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 사안별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국제사회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북한인권보고서의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 집중
  - 연구기관, NGO 등과 협력하여 북한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국제사회에 제공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과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제사회에 제공함.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전략의 효과 분석

#### <북한 개발과정에서 인권개선 전략 수립>

- 문타본 보고서에서 보듯이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과정에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북지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의 인권적 관심 제고 노력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략들을 검토하고 북한 개발협력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
  - 개발협력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다각적인 탈북자 보호 방안 모색>

- 협약난민, 현장난민 등의 지위모색에서 보듯이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구체적 실태에 기반한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함.
  - 특히 해외 체류 과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실태와 보호 방안 모색
  -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재결합의 문제 등
- 재외 탈북자 출산 아동들의 국적부여 및 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적 협력틀 마련이 시급함.
  - 관련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탈북자가 출산한 아동들에게 국적부여 가능



- 부모 및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적절한 국적부여방안 모색
  - 국제아동권협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아동교육 의무화
- 탈북자들의 가족이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국제사회는 난민 및 이주민들의 가족결합을 기본원칙으로 설정
  - 중국 내 출산 아동 및 관련 가족들과의 결합은 중국과 협의 필요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               |   |          |    |         |
|---------------|---|----------|----|---------|
| 2006-01       |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 임강택      | 저  | 7,000원  |
| 2006-03       |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 최수영      | 저  | 5,000원  |
| 2006-04       |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 이 석      | 저  | 8,000원  |
| 2006-05       |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6       |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 전현준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7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br>-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김영운      | 저  | 10,000원 |
| 2006-08       |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 손기웅      | 저  | 6,000원  |
| 2006-09       |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 정영태      | 저  | 7,500원  |
| 2006-10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 황병덕      | 저  | 8,500원  |
| 2006-11       |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 서재진      | 저  | 10,000원 |
| 2006-12       |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조 민      | 저  | 6,500원  |
| 2006-13       |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6-14       |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 박영호      | 저  | 7,000원  |
| 2006-15       |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배정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6       |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 임순하      | 저  | 8,000원  |
| 2006-17       |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 이금순, 김수암 | 저  | 10,000원 |
| 2006-18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 조정아      | 저  | 6,000원  |
| 2006-19       |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01       |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 최진욱      | 저  | 6,500원  |
| 2007-02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7-03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 서재진      | 저  | 8,500원  |
| 2007-04       |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7-05       |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 손기웅      | 저  | 7,000원  |
| 2007-06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 이교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7-07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최수영      | 저  | 6,000원  |
| 2007-08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허문영 외    | 공저 | 10,000원 |
| 2007-09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 정영태      | 저  | 6,000원  |
| 2007-10       |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허문영 외    | 공저 | 9,000원  |
| 2007-11       |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br>: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영태 외    | 공저 | 7,000원  |
| 2007-12       |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br>대응전략                 | 김국신 외    | 공저 | 8,500원  |
| 2007-13       |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저  | 6,000원  |
| 2007-14       |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7-15( I )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김규륜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5(II)-1 |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II)-2 |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II)-3 |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       |    |         |
|---------------------------------|-------|----|---------|
|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 김영운 외 | 공저 | 8,000원  |
| 2007-17 북한의 통계: 기용성과 신뢰성        | 이 석   | 저  | 8,500원  |
|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 이금순   | 저  | 7,000원  |

#### 학술회의총서

|  |  |  |         |
|--|--|--|---------|
|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  | 10,000원 |
|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  |  | 9,500원  |
|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  |  | 10,000원 |
|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br>: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  |  | 9,500원  |
|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  |  | 7,000원  |
|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 8,500원  |
|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  | 10,000원 |
|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  |  | 9,000원  |

#### 협동연구총서

|   |       |    |         |
|---|-------|----|---------|
|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 안보전략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 경제전략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    | 10,000원 |
|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br>구축방안(총괄편)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br>구축방안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 공저 | 6,000원  |
|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 손기웅 외 | 공저 | 9,000원  |
|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br>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 최대석 외 | 공저 | 7,500원  |
|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br>(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br>논의와 개념적 틀    | 임성학 외 | 공저 | 9,000원  |
|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br>활성화 방안         | 배정호 외 | 공저 | 6,500원  |
|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함택영 외 | 공저 | 6,000원  |
|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전성훈 외 | 공저 | 6,500원  |
|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김규륜 외 | 공저 | 8,000원  |

|            |  |       |    |         |
|------------|--|-------|----|---------|
| 2007-11-07 |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이교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1-08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br>: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 양현모 외 | 공저 | 7,500원  |
| 2007-11-09 |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박광기 외 | 공저 | 8,500원  |

### 논 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  |       |    |         |
|--|-------|----|---------|
| 북한인권백서 2006  | 임순희 외 |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 임순희 외 |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7  | 김수암 외 |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 김수암 외 | 공저 | 10,000원 |

### 독일통일백서

|                  |        |
|------------------|--------|
| 2006 독일통일백서 2005 |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 6,000원 |
|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 6,000원 |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         |                               |                              |
|---------|-------------------------------|------------------------------|
| 2006-01 |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
| 2006-02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전현준, 김영운                     |
| 2006-03 |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김수암, 이금순                     |
| 2006-04 |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
| 2006-05 |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
| 2006-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 서재진, 김영운                     |
| 2006-07 |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 김국신, 배정호                     |
| 2006-08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 김영운                          |

|         |   |                              |
|---------|---|------------------------------|
| 2006-09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6-10 |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 배정호                          |
| 2006-11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
| 2006-12 |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6-13 |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 김규륜                          |
| 2007-01 |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
| 2007-02 |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
| 2007-03 |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김수암, 이금순                     |
| 2007-04 |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
| 2007-05 |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 전성훈                          |
| 2007-06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 최수영                          |
| 2007-07 |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 최수영                          |
| 2007-08 |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
| 2007-09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 김국신, 여인곤                     |
| 2007-10 |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 배정호                          |
| 2007-11 |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 정영태                          |
| 2007-12 |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 2007-13 |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 여인곤                          |
| 2007-14 |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
| 2008-01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
| 2008-02 | 중국 11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 전병곤                          |
| 2008-03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 전현준                          |
| 2008-04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8-05 |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 배정호                          |
| 2008-06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 분석              | 최수영                          |
| 2008-07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 이금순, 김수암                     |

#### KINU 정책연구 시리즈

|         |  |                    |
|---------|--|--------------------|
| 2006-01 |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 김영윤                |
| 2006-02 |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 박영호                |
| 2006-03 |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 임을출                |
| 2006-04 |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 김규륜                |
| 2006-05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 전현준                |
| 2006-06 | 국내의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 서보혁                |
| 2006-07 |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 고재홍                |
| 2006-08 |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 이현근                |
| 2006-09 |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전미영                |
| 2007-01 |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전성훈                |
| 2007-02 |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 조한범                |
| 2007-03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
| 2007-04 |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 박형중                |
| 2007-05 |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
| 2007-06 |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 임을출                |

|         |                                   |     |
|---------|-----------------------------------|-----|
| 2007-07 |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진욱 |
| 2007-08 |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성훈 |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                               |               |
|------|-------------------------------|---------------|
| 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
| 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
| 2007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
| 2008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

#### 월간 북한동향

|      |                 |       |
|------|-----------------|-------|
| 2007 |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 북한연구실 |
| 2007 |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 북한연구실 |

####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      |                      |                              |
|------|----------------------|------------------------------|
| 2007 |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 허문영, 김수암, 여인근,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         |  |   |
|---------|--|---|
| 2006-01 |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 Kim Soo-Am  |
| 2006-02 |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 Huh, Moon-Young   |
| 2006-03 |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 Cho, Min  |
| 2006-04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 Choi, soo-young   |
| 2006-05 |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 Keumsoon Lee  |
| 2006-06 |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 Cho, Jeong-Ah   |
| 2007-01 |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 Lim, Soon-Hee   |
| 2007-02 |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 Jeung, Young-Tai  |
| 2007-03 |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 2007-04 |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 Kim, Young-Yoon   |
| 2007-05 |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 Choi, Soo Young   |
| 2007-06 |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통일정세분석 2008-07

---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8(代), 팩스 : 901-2546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8년 5월 일  
발행일 2008년 5월 일

---